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7. 24. 화. 오전 11시 30분	
	담당	장하나	010-3693-3971
배포일시	2018. 7. 24. 화	총 매 (별첨 0건)	

[다자녀가정 혐오댓글사건 엄정수사 촉구기자회견] 표현의 자유는 폭력의 자유가 아니다!

- 정치하는엄마들, 혐오표현을 규제하지 않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혐오표현을 조장하고 있어
- 다자녀가정 혐오댓글 피해자가 네이버 뉴스 포털에 달린 혐오댓글 고소하고, 혐오댓글이 얼마나 심각한 폭력인지 당사자 육성으로 규탄
- 혐오댓글규제법안 철회에 유감, 정부와 국회는 성소수자 혐오하는 일부 기독교 세력 두둔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를 지켜라!

- 일시 : 2018년 7월 24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경찰청 정문 앞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기초 발언 : 조성실 활동가
 - 당사자 발언 : 김OO 회원 (7남매 양육자, 혐오댓글 피해자)
 - 당사자 발언 : 자녀1 (혐오댓글 피해자)
 - 당사자 발언 : 자녀2 (혐오댓글 피해자)
 - 연대 발언 : 김정덕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고소장 접수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 오전 경찰청 앞에서 다자녀가정 혐오댓글사건 엄정수사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혐오표현 및 혐오범죄를 방지하는 정부를 성토했다. 또한 지난 2월 발의된 지 보름 만에 철회된 혐오표현규제법(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피해 당사자들과 2차 피해자인 우리 아이들을 방기한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다자녀가정 혐오댓글 피해 당사자 가족이 나와 혐오댓글의 폭력성을 증언하고,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증폭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지난 6월 16일 연합뉴스TV에 인터뷰 기사([아기는 우리의 희망] 나라가 애 키워준다?...다둥이 가족의 속사정)가 나간 이후 7남매 엄마 김OO님과 그 가족들은 수백 건의 혐오댓글에 시달렸고, 오늘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김OO님은

□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혐오표현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며 ‘영화도 관람 연령등급이 있는데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포털 댓글의 폭력성과 선정성은 이를 접하는 아이들

에게 정신적 학대 수준' 이라도 강조했다. 아울러 조성실 공동대표는 '최근 안희정 전 지사나 이재명 지사 관련기사나 예멘 난민 기사, 해화역 시위 기사, 쿼어퍼레이드 기사 등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성인도 읽기 힘든 수준이다. 내 아이가 글을 읽게 되는 게 두려울 지경'이라며 '정부가 혐오표현을 방치함으로써 혐오문화가 조장되는 이상 혐오표현규제법이 조속히 재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7명은 짐승도아니도 그냥다짜질러놨네 정부믿고애
남음?

7년을 배 불러 있었네. 좀 인간 답게도 살고 그러세요 ㅈㅈㅈㅈ

애들 많은 집보면 둘다 종나 밝히는거같어 특히 여자 어흐 섹수올라잇!!

지들이 좋아서 낳아놓고 이제와서 돈내놓으라고? 자식팔아 장사하냐? ㅈㅈ

다가죽보면 대부분 부모들이 미개하더라 대책도없고 계획도없이 애쳐질러낳아놓고선 지네들이키울 능력안되니 꼭나라탓하더라 나라가 출산강요하는 것도아니고 강제로애낳으라시키는것도아니고 애 낳은건 순전히자기들선택아닌가?

뭘 그리 많이 낳냐 햄스터냐



섹할때 좋았지ㅈㅈㅈㅈ 저지르고 생각하지말고 생각하고 저질러라

뭔소리야? 능력껏 낳아라 무슨 축사에 소나 돼지도 아니고 뭘 나라에서 키워주냐?

<기자회견문>

표현의 자유는 폭력의 자유가 아니다! 정부는 혐오표현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다.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또한 절대적이다.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것을 방치하는 대한민국 사회는 비정상 사회다.

오늘 이 자리에는 혐오댓글의 폭력성을 고발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 가족이 당당히 나섰다. 이들이 치른

고통과 지울 수 없는 상처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인가? 이들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도 더 이상 혐오표현의 문제를 방관해선 안 될 것이다. 혐오표현을 방치함으로써 혐오문화를 조장한 정부는 공범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사실을 이해조차 못하는 무능함으로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을 가했다. 오죽하면 피해자가 신분의 노출을 감수해가며 경찰청 앞에 서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에 이르렀겠는가?

지난 2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원신분으로 혐오표현규제법과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위 법안은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혐오표현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원은 혐오표현 피해자를 위해 혐오표현의 중지, 원상회복 등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혐오표현이 악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일부 기독교 세력의 거센 반발로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보름 만에 철회되었다. 2013년 두 건의 차별금지법이 보수 기독교 세력의 반발로 철회된 것 사건을 상기시킨다.

정부와 국회가 혐오표현규제를 포기한 사이 혐오댓글의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관련 기사나 이재명 지사의 스캔들 기사, 예멘 난민 기사, 해화역 시위 기사, 쿼어퍼레이드 기사 등 포털사이트 메인페이지를 통해 접근하기 쉬운 뉴스 댓글을 보면 폭력성과 선정선이 위법한 수준을 넘고 있다. 특정인이 연루된 사건도 여성 혐오, 남성 혐오로 이어지고 외국인 혐오, 성소수자 혐오 뿐 아니라 가난과 외모와 지역과 세대를 이유로 온갖 차별과 혐오가 넘쳐난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혐오의 폭력이 이제 평화롭고 다복한 한 다자녀가정을 희생양으로 삼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혐오표현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혐오의 문화는 이미 아이들의 교실을 잠식하고 말았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 10월 <대한민국 제15~16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자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오표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인종우월주의의 전파 또는 인종적 증오선동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밝힌다. 위원회는 당사국(한국)이 미디어,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발화자를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할 것을 권고한다.’ 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2월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당사국(한국)은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사람들의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틀을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성정체성에 관한 포괄적이고 연령에 맞는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성별 재배정에 대한 법적 인정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또한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 및 존중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 캠페인을 개발, 수행하고 공무원을 교육해야 한다.’ 고 권고한 바 있다.

이미 대다수의 유럽 국가와 캐나다, 뉴질랜드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 법규가 있다. 일본 역시 재일조선인과 한국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막기 위해 2016년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을 제정했다. 독일에서는 망명신청자를 하등 동물에 비유하면 처벌 받고, 캐나다에서는 동성결혼을 비난하는 전단지 배포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본 법원은 2014년 ‘바퀴벌레, 구더기, 한반도로 돌아가라’라는 구호를 외친 반한집회를 개최한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 일명 재특회에 한화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선고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 묻는다. 혐오댓글 피해자들의 삶이 망가지고, 혐오문화 속에 아이들의 영혼이 좀 먹고 있다. 진정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 보수 기독교 세

력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이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것은 과연 누구이고, 무엇인가? 정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요구한다.

1. 경찰당국은 다자녀가정 혐오댓글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라.
1. 대통령은 혐오표현과 혐오문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단호히 천명하라.
1. 국회는 혐오표현금지법을 재추진하고, 정부는 혐오표현을 규제하라.

2018년 7월 24일

정치하는엄마들